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 모임 발족

여야·지역 초월 지방 무시정책 강력 대응

‘수도권 철폐 법률안’ 개정 저지 나서

다음주 대규모 장외 집회 동참키로

비수도권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수도권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결성식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수도권 국회의원 80여명이 6일 결성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연대 모임이다.

정부의 지방 무시 행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여야와 지역을 뛰어 넘어 초당적 연대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연대 모임 구성=연대 모임은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주축이 됐다.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5개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권경석·김성조·배영식 의원, 민주당 이낙연·이시종·이용섭·최인기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류근찬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지난 3일 사전 모임을 갖고 이날 연대 모임 결성을 이뤄냈다.

이날 첫 회의 참석 의원은 80여명. 연대모임 측은 첫 모임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만큼 향후 모인 참여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참여 의원들은 당의 설득을 의식 “뜻은 같이 하나 행동은 지방대책이 공식 발표된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떠 향후 결집력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연대 모임 측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 규제 철폐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대 모임은 정부의 방침은 헌법 제120조의 ‘균형발전의 가치’와 제123조의 2항의 ‘국가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 모임은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주겠다는 발언에 대해 “개발이익금은 매년 1천5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정도의 투자효과로 인해 지방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한마디로 말해서, 코끼리 비스킷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행동 방향=연대 모임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법률안의 개정을 저지하거나 수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 수도권규제 철폐 억제 등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위반 부분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지방균형발전협의체와 시민단체가 다음주께 개최할 예정인 대규모 장외집회에 동참하겠다고 말해 원내와 장외투쟁을 병행할 뜻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입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는 우선 상임위별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의 경우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구상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 지원 특별법(가칭)’이 모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수도권 인구총량제를 도입, 현재 49%인 인구 비중이 40~45%로 줄어들 때까지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물과 공공청사 등에만 부과되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택지와 공장, 대학 등 모든 인구집중유발시설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인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을 환수해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지역발전세’ 신설 내용도 법안에 담겨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말살 정책”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비판 쏟아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책에 대한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6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홍재형(충북 청주) 의원은 “현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의 헌법상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부추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 철폐 후 (이명박) 대통령은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의 정부 입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누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겠느냐”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떳떳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은 “수도권 규제의 일방적 완화는 수도권은 과밀화로 죽이고 지방은 공동화로 죽이는 공멸 정책”이라며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상 국가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같은 당 이광재(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방말살정책’이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사실상 지방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 의원도 “수도권규제 철폐는 ‘지방죽이기’의 완결판으로 이는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을 상생과 통합이 아닌 분열과 대립으로 이끄는 망국적인 조치”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도 “지자체·야당, 일부 지방 여당 의원조차 지방경제를 말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동조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박병원 수석이 이날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한 조찬 강연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진땀을 뺐다.

박 수석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과 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참석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경제수석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국론이 분열될 위기에 와 있는데 다른 얘기만 했다”며 “노련한 박 수석한테 당한 느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지역현안 여론 수렴

한나라 여의도연구소 6일 현장 방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6일 전남지역을 방문해 지역현안 청취와 현장 방문 등 여론 수렴에 나섰다.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김성조 국회의원과 소속 연구진 25명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재영 행정부지사, 고영길 기획실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도정 현안을 청취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이 지역 최대 현안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역 SOC확충 사업,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여의도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소 책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현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지의 생생한 얘기들이 당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연구진은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현장과 J프로젝트 예정지, 현대삼호중공업 현장 등을 방문하고 이날 저녁 해남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나라당 전남지역 워크숍을 가졌다.

이들은 7일 기업규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영암대불공단 ‘전봇대’ 현장을 둘러보고 해남과 영암의 고구마 농가와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상경한다.

김성조 소장은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질 때 생동감이 있다는 생각으로 1박2일 일정을 잡아 전남지역을 방문했다”면서 “대불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농가 봉사활동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수박람회 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주승용 의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6일 여·야 의원 17인과 함께 박람회장 조성 지역 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을 규정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박람회 관련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안의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근거가 없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광주 서구의회 성명

광주 서구의회는 6일 “정부는 지방을 고사시킬 것이 분명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중단되고 지방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복귀하면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져 지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구의회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확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